

김대중호 “교육 대전환 표준, 전남광주서 만든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입시·평가체제 표준 설계 시도민·교직원 4000명 여론 수렴 교육정책에 반영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교육청 당선인 측은 통합교육청을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입시·평가체제 설계와 AI 교육 전환, 교육자치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 시도민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혀 향후 통합교육청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중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9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둔 정책 추

진 방향과 시민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전환하기 위해 '실무·현장 중심 정책 설계'와 '시민 참여형 정책 공유'를 앞대 축으로 설정했다. 광주와 전남 교육 현장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면서도 통합 이후 새로운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준비위는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경범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을 지낸 문순태 부위원장 등 현장과 정책 경험을 갖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입시·진학·평가 분야 전문가인 김



김대중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9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둔 정책 추진 방향과 시민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장을 전면에 배치한 것은 통합교육청을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시험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준비위는 앞으로 4개 핵심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설계 작업에 나선다.

광주에 분부를 두는 통합교육기획위원회는 통합교육청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새로운 교육과정과 평가체제를 설계한

다. AI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 교육행정 혁신을 담당한다.

전남에 설치되는 자율분권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 확대와 학교 지원체계 개편, 교권 보호 및 돌봄 정책을 논의한다. 메가시티교육위원회는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 구축과 직업교육 혁신, 지역

경제형 인재 양성 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여론 수렴에도 나선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시도민·학부모 2000명과 교직원 2000명 등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청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시도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전화면접을 진행하며, 교직원 대상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에서는 통합교육청에 대한 기대와 우려, 기초학력 보장, AI 미래교육, 학교 및 입학전형, 교육행정 조직 운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 시민사회, 대학,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온라인 개방형 플랫폼 '준비위에 바란다'도 운영해 시민 누

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범 위원장은 “안정적인 통합을 이룰 공여부는 시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달려 있다”며 “현장조사로 확인된 현장의 요구를 통합교육청의 첫 설계도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당선인은 “K-교육특별시의 성공 여부는 시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달려 있다”며 “현장과 실무,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비위는 10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7월30일까지 운영된다. 활동 기간 통합교육청 핵심 과제와 정책 비전을 담은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정리한 'K-교육특별시 실행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여야 쌍끌이에 급물살

민주, ‘선거제개혁TF’ 꾸려 국힘, 특검법도 국회 제출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의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조 추진과 별도로 국민의힘은 9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조 추진과 관련해 “신속하게 여야 간 협의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선관위 개혁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며 “당양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 주 내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부정 선거론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명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지 부족 관련 국정조사안 원내 신속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통령을 국정조사 또는 특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송기헌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TF는 10일 오전 첫 회의를 연다.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선관위법 개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도입 △중앙선

관위원의 임기 단축 등을 담은 헌법 개정 제안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데 이어 이날 ‘제9회 지선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이 서명한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투표 포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미이행이 개표부 강행한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배출의

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 중 이송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이다.

특검 임명은 당당이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법률전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선 이의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신수정 복구청장 당선인 인수위 출범

민선 9기 운영 준비…위원장에 조호권 전 시의회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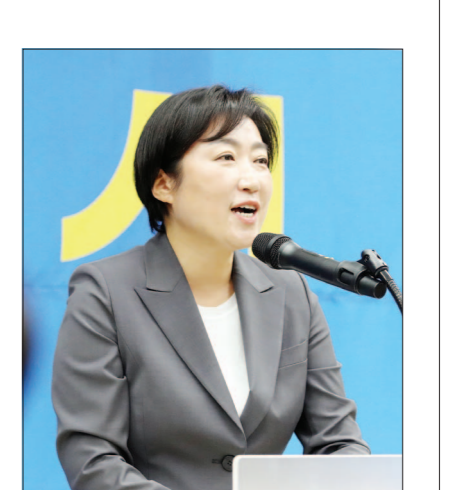
신수정 광주 복구청장 당선인의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인 ‘주민주권도시 으뜸복구 준비위원회’가 민선 9기 안정적 구청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주민주권도시 으뜸복구 준비위원회는 9일 옹골동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신수정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원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에 이어 위촉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원장은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 부위원장은 이연 전 광주시 국장이 임명됐다.

인수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활동하며 복구 조직과 예산,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공약 이행 로드맵 마련과 취임 100일 우선 과제 선정 등을 맡는다. 세부적으로 인수위는 주민기획, 안전경제, 문화생태, 보건복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분야는 주민주권 행정, 민생경제와 도시안전, 문화·환경 정책, 통합돌봄과 보건복지 전달체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인수위는 ‘복구 수혜 취약지역 예방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구성



신수정 복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위원장 조호권 전 시의회 의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특별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재민·하천·도시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해 협력체계를 넓혀갈 계획이다. 특별위는 신안교와 서방천 일원 침수 원인 분석, 하천·하수 체계 개선, 침수경보 예방 시스템, 재민 대응 매뉴얼 정비, 국·시비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10일부터 복구청 실·국별 주요 현안과 중점 추진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구청 파악에 들어간다.

이산희 기자 goback@

민형배 인수위 고문에 이광재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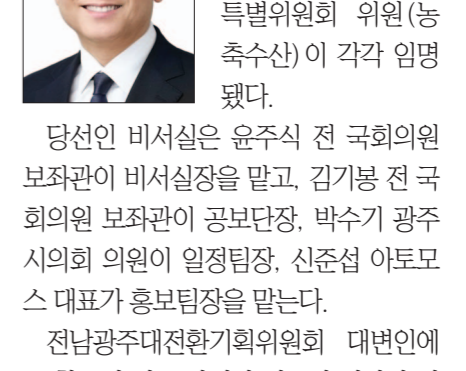
고문단·대변인·비서실 등 추가 인선 명단 발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고문으로 이광재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9일 고문단과 대변인, 비서실의 추가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고문에는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이, 자문위원으로는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와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선임됐다.

특별고문역에는 허석 전 순천시장(자치분권), 주은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경제),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산업), 양인상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과학기술), 김승휘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법률)가 임명됐다.

특별보좌역에는 김수형 전남대학교 교수(AI),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단장(모빌리티), 정은호 전 한전 경계경영연구원장(에너지), 홍원표 전 삼성전자 사장(반도체), 김형서 화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바이오헬스), 김명준 전 EBSS 사장(문화콘텐츠), 박상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고문으로 이광재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대변인으로는 윤주식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비서실장을 맡고, 김기봉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공보단장,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이 일정팀장, 신준섭 아모스 대표가 홍보팀장을 맡는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대변인에는 황동현 전 문화재단 대표와 김광란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임명됐다.

대전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임명된 인사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지원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소통, 당선인 업무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특별위원회 등 추가 인선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선관위 개혁 위한 원포인트 개혁해야”

정진욱 의원, 감사원 감찰 위한 헌법 조항 손질 등 제안

정진욱 국회의원(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을 제안했다.

정진욱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포인트 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 ‘셀프 개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선관위의 혁신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선관위가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관련 규정들을 손보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감사와 감독이 가능토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진욱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서는 유독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선거관리 업무 전반은 물론, 인사나 재정에 대해서도 행정부, 감사원, 국회 등의 적절한 감사나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권한 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만큼 선관위도 그 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지고, 이를 위한 개혁과 관리 감독 및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반도체 팹 유치, 이제는 실행의 문제”

임문영 의원, AI·에너지·인재 기반 갖춘 경쟁력 강조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사진)이 최근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 후보지로 전남·광주권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도체 팹 유치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지역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임문영 의원은 9일 논평을 내고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전남·광주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AI 산업 기반과 풍부한 재생에너지, 우수한 인재와 연구역량, 미래모빌리티 산업 기반 등 지역이 가진 잠재력이 새롭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반도체 팹은 연구기관과 협력기업, 양질의 일자리, 청년 인재를 함께 모이는 미래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방소멸과 제조업 쇠퇴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산업거점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산희 기자 goback@gwangnam.co.kr